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인도 정부, 농가 소득 안정화 위한 지원정책 발표



인도의 소농 인구는 약 2억 1,600만 명으로, 대부분이 대출받기 어렵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이다. 근래 채소값 하락 등 농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무이자 대출, 무담보 대출, 소득 지원 등을 고려하여 빈곤 농가층 재정지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실제 예산안에 포함된 지원 정책이 실행될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5월 총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 정부, 취약계층 농민들을 위한 패키지 검토

현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예산안 발표 전 무이자·무담보 대출, 소득 보조금 제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 패키지를 검토 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도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안을 확립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고 개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5월 총선에서 농민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 농업부가 논의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취약 계층 농민들에게 소득 보조금을 지원하고 30만 루피(한화 약 47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무이자 대출을 달가워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자액을 배상할 경우 은행들이 정부 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만 루피(한화 약 315만 원)에서 최대 30만 루피(한화 약 47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무담보 대출 역시 농민 재정지원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용보증기제 등을 확립하지 않는 한 무담보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관대한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 재무부는 여러 부처에 새로운 제도를 위한 예산안 할당을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현재 기한에 맞게 대출을 상환하는 농민들에게 이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무이자 대출을 모든 농민들에게 적용할 것인지 제 시기에 상환하는 농민들에게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상황이다.

정부, 빈곤 농가 위한 소득보조금 지급

본 패키지는 정부 예산안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 계층 농민들에게 헥타르(Hectare) 당 6천 루피(한화 약 9만 5,000원)가 직접소득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2 헥타르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4개월 마다 2천 루피(한화 약 3만 1,500원), 1년에 총 6천 루피(한화 약 9만 5,000원)를 지급받게 되며, 천 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2.5%의 이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본 정책 시행으로 총 7,500억 루피(한화 약 11조 8,000억 원)의 정부 비용 발생이 예측되고 있으며, 약 1억 2,000만 명의 농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 Businesstoday, Budget 2019: Modi govt's new scheme offers Rs 6,000 directly into farmers' bank accounts, 2019.02.01
- Indianexpress, Farmers package in the works: Income support scheme and interest-free loans, 2019.01.15